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국내난민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난민 관련 정부 부처들에 난민의 처우와 관련한 131 가지 정보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그 중 비공개 된 정보는 54 건으로 ‘정보 부존재’와 ‘외교 관계 및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유였습니다. 2 개의 정보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이에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국내 난민 처우 현황(2017. 12. 31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PART.3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간단히 보는 2017년 국내 난민신청자 생계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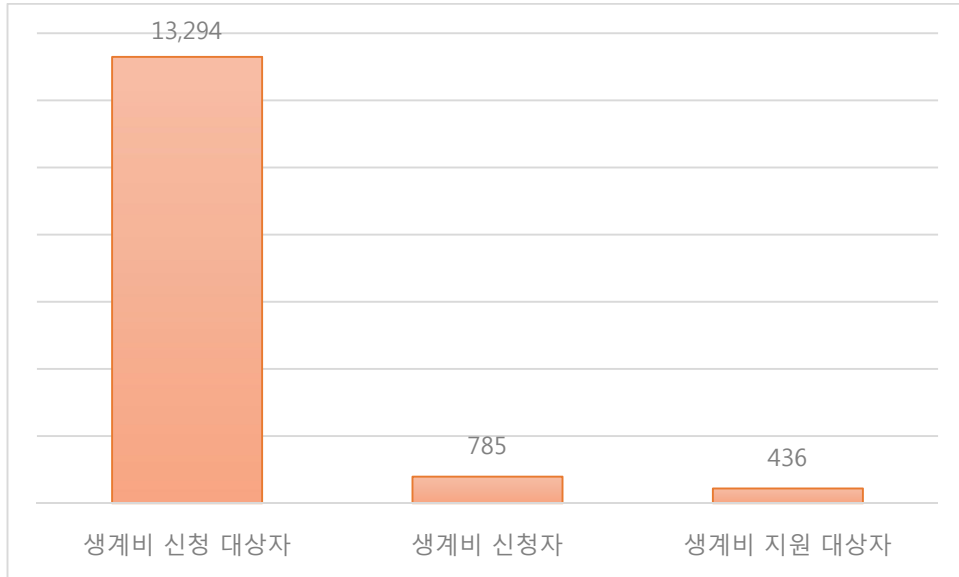
- 3.2%** 2017년 생계비 지급대상자 13,294명 중 436명만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817,000,000 원** 2017년도 생계비 예산 지출액은 2016년과 동일합니다.
- 5.85%** 생계비로 지출된 8억 1천 7백만 원은 한국 거주 이주민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 139억 5천 5백만 원 중 5.85%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생계비 지원 현황

전체 난민 신청자의 3.2%에게만 돌아가는 생계비지원

[그래프1] 2017년 기준 난민신청자 중
생계비 신청 대상자, 신청자, 지원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그래프2] 난민법 시행 이후 연도별 생계비 지급률

(단위: %)



2017년 한 해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총 436명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생계비 지급 대상자 13,294명¹ 중 단 3.2%만이 실제로 생계비를 지급받은 셈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억 1천 7백만 원으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생계비예산은 난민신청자의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2016년 기준 전체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이 8.6%에서 2017년 3.2%로 63% 떨어졌습니다. 한편, 생계비로 지출된 8억 1천 7백만 원은 한국 거주 이주민이

¹ 난민신청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난민신청자 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 139 억 5 천 5 백만 원² 중 5.8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7 년 한 해 동안 이주민이 지불한 수수료의 총액은 현재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공개 받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표 1] 2017 년 생계비 지원기간 내역(생계비 지급 기간별 통계)

기간(개월)	1	2	3	4	5	6	7	8	계
인원	174	94	145	206	73	4	11	3	710 ³

[표2] 2018년 기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원)

출입국외국인지원 센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비이용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이용자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표1] 생계비 지원기간 내역을 살펴보면, 4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은 이들이 20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1개월, 3개월, 2개월 등의 순입니다.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지급 받은 평균 기간은 3개월⁴ 입니다. 난민법 제 4조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초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급 받은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 것은 ① 생계비 지원 제도를 법무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난민신청자가 뒤늦게 생계비를 신청하였거나, ② 생계비 신청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의 개설, 생계비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심사 대기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 탓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난민신청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길게는 2개월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 홍보도 못 한다? 있으나 마나 한 생계비 제도

생계비예산이 전체 신청자의 3.2%밖에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니, 생계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2017 년 한 해간 생계비를 신청한 사람은 총 785 명으로, 전체 난민신청자 13,294 명 중 단 5%만이 생계비를 신청한 셈입니다. 여전히 많은 난민신청자가 생계비신청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²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수입 13,955,000원, 출처: 법무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³ 16년도 선정되어 '17년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274명 포함, 출처: 법무부 난민과

⁴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2.05 회신)

한국입국 이후에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과 오리엔테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난민신청 초기 6 개월 동안 삶의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12,509 명은 한국에 유령처럼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 3] 2017 년 국적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단위:
명)

국적	나이지리아	이집트	라이베리아	세네갈	우간다	기타	계
인원	151	82	44	44	44	420	785

[표 4] 2017 년 국적별 생계비 지원 대상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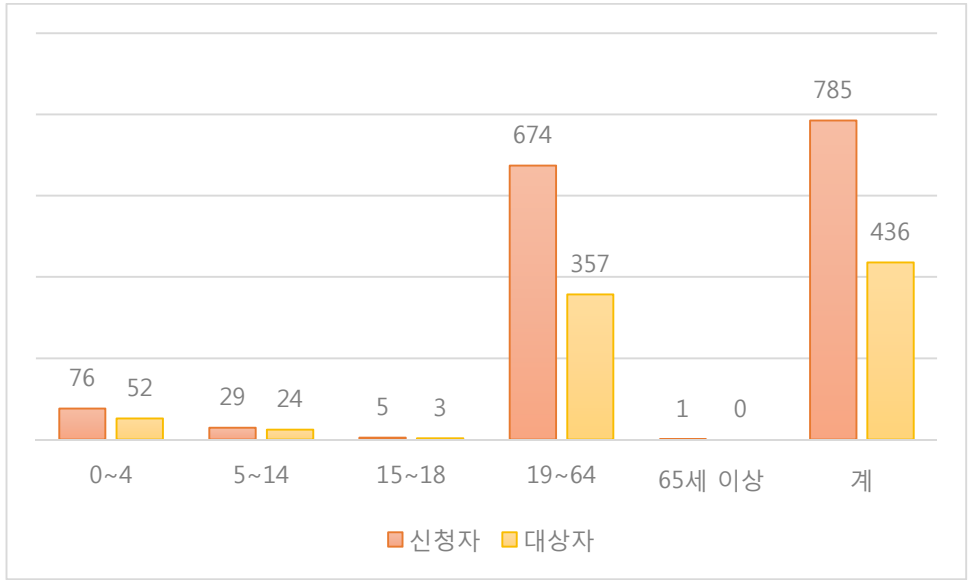
국적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카메룬	예멘	기타	계
인원	88	51	25	24	23	225	436

2017 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생계비를 신청한 국적은 나이지리아, 이집트, 라이베리아, 세네갈, 우간다 순입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들 대부분의 국적은 ① 지역 및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이를 통해 생계비 신청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구하거나 ② 난민, 이주민 단체 또는 ③ 종교 조직 등을 통해 생계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비 신청이 많았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신청자들이 지원대상자에 88 명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에 포함된 국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대상자를 기록한 국적은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카메룬, 예멘 국적 순입니다. 지급대상자 전원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난민지원단체로의 접촉비율이 높다고 파악되는 국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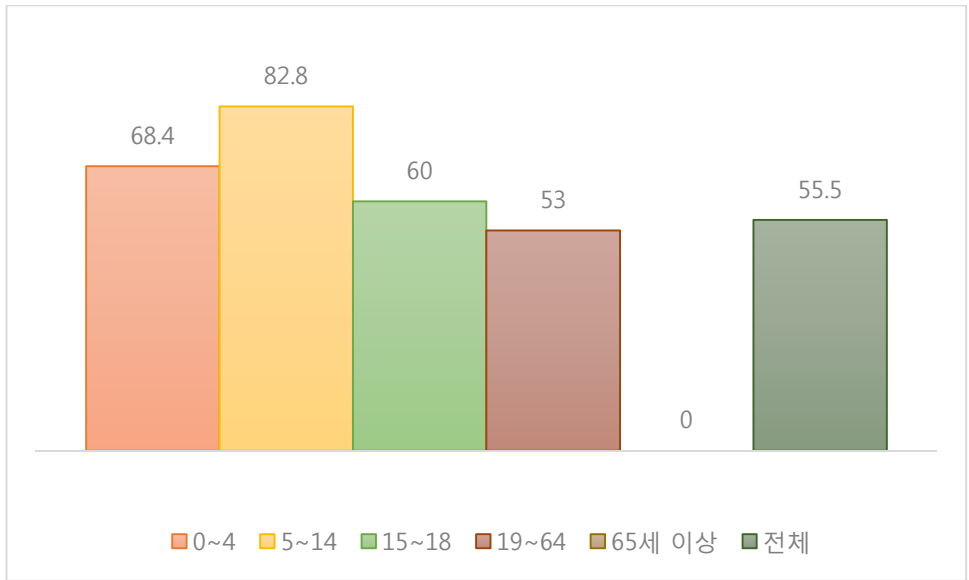
[그래프 3] 2017 년 연령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대상자

(단위: 명)



[그래프 4] 2017년 연령별 생계비 지원율

(단위: %)



연령별 생계비 지원율을 보면, 모든 연령대 중 5~14 세가 82.8%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0~4 세, 15~18 세, 19~64 세 순입니다. 0~4 세의 연령대보다 5~14 세 연령대의 난민신청자 아동이 더 높은 생계비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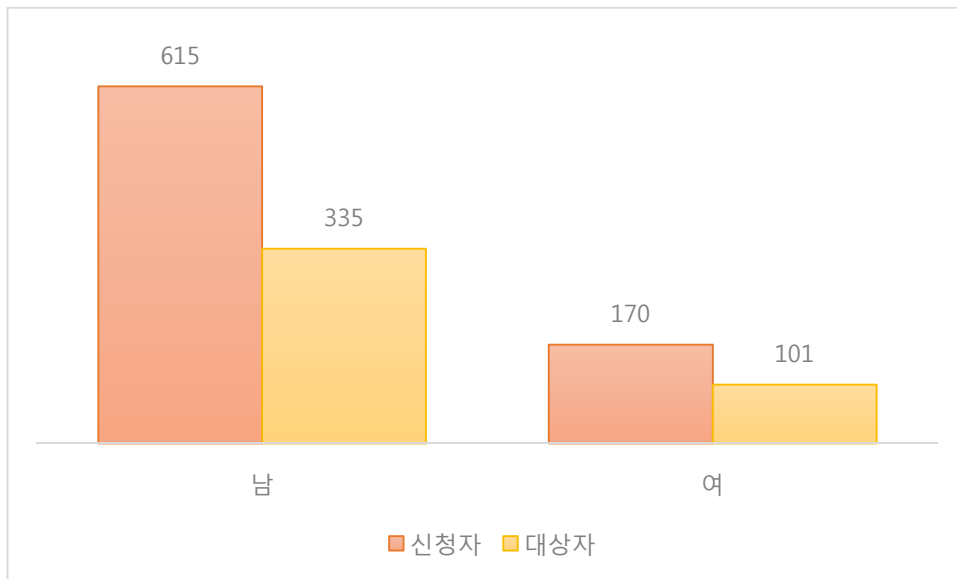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65 세 이상 연령대입니다. 1994 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2017 년 12 월 말까지 65 세 이상의 난민신청자 누적 수는 총 110 명으로, 이 중 난민인정을 받은 5 명,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13 명을 제외한 나머지⁵는 100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는 이들 중 단 1 명 만이 생계비를 신청하였으며 이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한 65 세 이상의 난민신청자는 ① 잦은 질병 ② 중증 질병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지 못해 발생하는 2 차, 3 차의 건강문제 ③ 취업의 어려움 ④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질적 한계 ⑤ 자녀 동반의 경우 자녀의 체류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문제 ⑥ 네트워크의 제한으로 인한 고립감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65 세 이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프 5] 2017 년 성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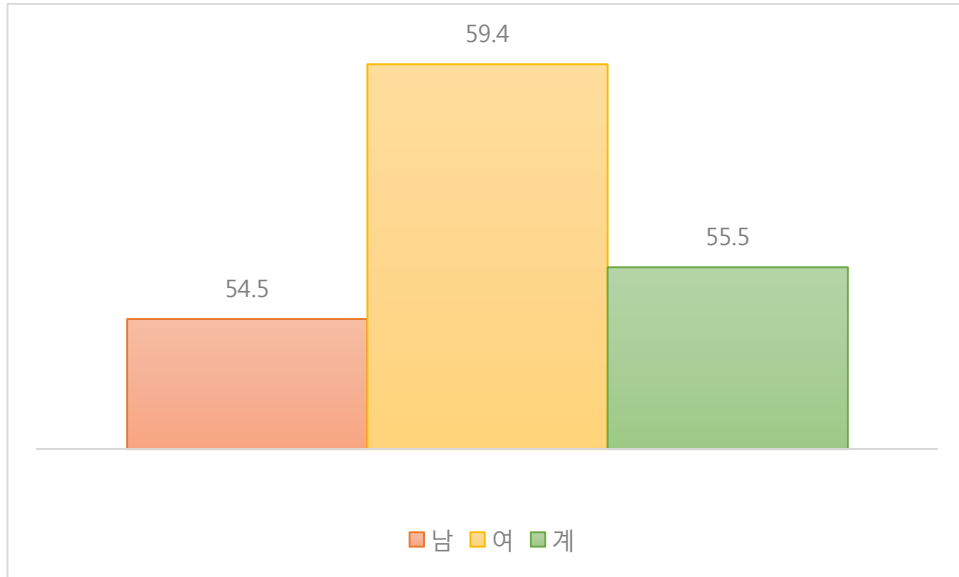
(단위: 명)



[그래프 6] 2017 년 성별 생계비 지원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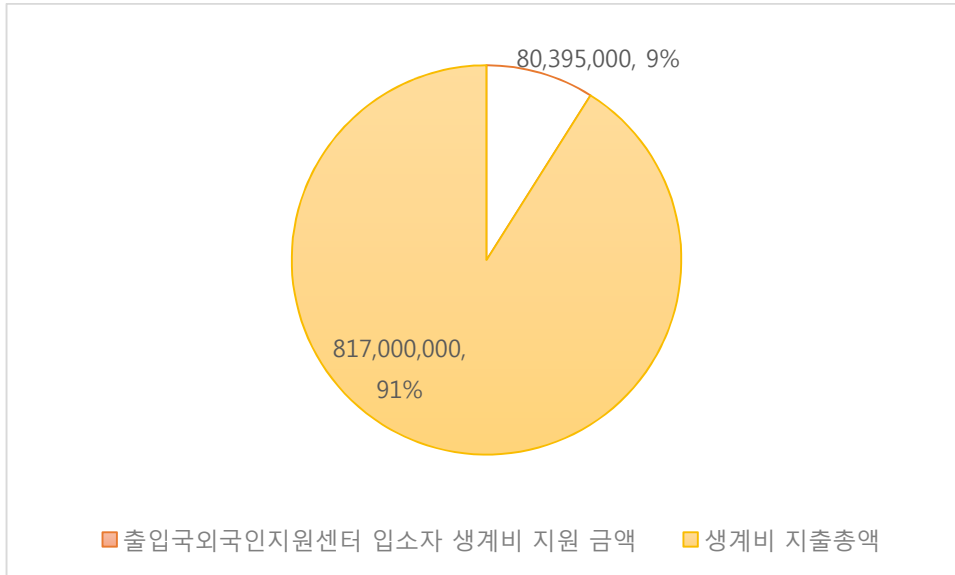
⁵ 철회, 취소, 불인정자 통계는 정보공개 받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함.



성별 생계비 지원율은 여성이 59.4%로 남성 54.4%보다 5%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계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남성이 335 명으로 여성 101 명에 비해 234 명 많습니다. 1994 년도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누적 여성 난민신청자 수는 총 5,883 명이며 인정자는 307 명, 인도적체류허가자는 417 명입니다. 철회, 취소, 불인정자 통계는 정보공개 받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할 여성은 101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치우친 예산

[그래프 7] 2017 년 지원된 생계비 중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의 생계비 지원금액 비율



[그래프 기]은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생계비 지출총액 817,000,000 원 중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80,395,000 원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합니다. 2017 년도 전체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436 명이니, 이 중 58 명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한 신청자인 셈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한 난민신청자는 총 73 명입니다. 출입국외국인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의 79%가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하며 생계비지원제도를 알게 되고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난민신청자가 신청 후 6 개월 동안 취업금지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미 숙식이 제공되는 센터입주자 중심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생계비지원제도 자체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입소자의 대부분이 생계비지원제도를 소개받고 지원하게 되는 것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또한 현 생계비지원제도는 지원자선정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있지 않고,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정이 거부된 이유와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그야말로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2013 년 난민법에 생계비 지급 규정이 포함된 이래, 법무부는 2014 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년은 생계비 제도 시행 3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생계비 지급 안내문은 아직 2014 년에 멈춰있습니다. 생계비 지급 기준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배포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아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하셔도 접수 가능합니다.
 (Applicants can also submit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 Living Expenses and Other Assistance" form below to immigration office or branch office.)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Application for Living Expenses and Other Assistance

※ 여권은 난민·적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Do not mark in the shaded area.

접수번호	접수일	제외기간	30일	
신청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국적 (Nationality)	전자우편 (E-mail)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연락처 (Contact Number)		
생계유지 관련 사항 (Living Maintenance)	취업여부 (Employment)	근무처 (Workplace)	근무기간 (Period)	보수 (Remuneration)
		부채(부) (Debt)	취직(일)	월(월)
		부채(부) (Debt)	취직(일)	월(월)
	재산 (Property)	부동산 (Real Estate)	동산 (Personal Property)	현 소득 (Current Income)
		월(월)	월(월)	월(월)
		월(월)	월(월)	월(월)
가족사항 (Family Information)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주거지 등 (Address in Korea, etc.)

*난민법, 제40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ssistance for living expenses, pursuant to Article 40(1) of the Refugee Act and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자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Guidelines for Living Expenses Support
for Refugee Status Applicants



난민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법무부는 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난민에게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오도록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라서는 생계비를 신청하는 사유를 자세히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한 난민신청자들은 주로 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전 생계비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해 준비가 부족하여 다시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② 생계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개설 과정에서 무리한 여권 요구 또는 특정 국적의 통장개설 제한 등에 직면 ③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없이 생계비 지원 신청을 위한 진술서를 추가로 작성할 것을 요구받아 헤매는 상황 ④ 그마저도 작성하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불필요한 인정에의 호소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거나 ⑤ 부양의무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적절한 서류를 본국에서 땄 수 없어 추가 증명을 하지 못하고 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라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라,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싱글 남성과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동시에 생계비 신청을 했을 때 전자만 생계비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⑦ 생계비를 신청했지만 언제, 어떻게 결과가 통보되는지 모르거나 (실제로 생계비 신청 결과가 고지되어도 전달 방식과 수단에 의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⑧ 생계비 지급 불허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난민생계비 제도 운영 주무부처 변경의 필요성

그동안은 난민 심사를 관장하던 주무부처가 법무부였기 때문에 생계비 운영 주체도 법무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쭉날쭉한 생계비 지급 기준과 심사절차, 권리 고지의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법무부가 생계비 제도 운영에 적절한 주무부처 인가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가 생계비 지급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업무에 대한 주무부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제도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정착과 처우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주무부처가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관련 통계, 2018.01.12 (공개)

법무부, 2017년 난민구료비 집행 내역 등, 2018.02.05 (공개)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고용, 산재보험 난민 관련 2018.03.07 (부존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산하 난민인정자 등록 지원 현황, 2018.03.14 (부존재)

교육부, 난민 초·중등 교육 현황 통계, 2018.03.14 (부존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017년 결산 관련, 2018.03.16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난민 관련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현황, 2018.03.19 (부존재)

보건복지부, 난민인정자 지원관련, 2018.03.21 (부존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난민인정자 지원 현황 관련, 2018.03.22 (부존재)

법무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소수자 난민 관련 통계, 2018.03.27 (공개)

법무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체류연장 관련, 2018.04.04 (공개)

법무부, 재정착 난민 관련 2017년 예산 상세 집행 내역, 2018.04.04 (공개)

보건복지부, 난민인정자 장애인 정책 관련, 2018.04.06 (공개)

교육부, 난민의 학력, 자격인정 관련, 2018.04.13 (공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G-1-5 비자 체류 연장 허가 관련, 2018.04.18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등록 관련, 2018.05.09 (공개)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각 외국인보호소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보호외국인 중 난민 현황, 2018.06.03 (처리 중)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관련, 2018.06.03 (처리 중)

대한적십자사,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난민 지원 현황, 2018.06.03 (처리 중)